

농식품 모태펀드 2470억 출자 청년·푸드테크 등 투자규제 완화

농식품부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
스마트농업 등 신산업 분야 1000억
청년기업성장펀드 투자 상한 폐지

올해 농식품 모태펀드가 2470억 규모의 자펀드 결성에 나선다. 특히 청년기업에 대한 투자 상한을 폐지하고 푸드테크 기업의 업력 제한도 없애는 등 투자 대상과 방식의 문턱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를 열어 지난해 모태펀드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출자 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농식품부가 정책자금을 출자해 조성한 공공 모태펀드이다. 민간 자본과 함께 자펀드를 만들어 농식품·농산업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다. 정부 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이를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며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청년·지역 농식품 기업 등 정책적으로 육성할 분야에 장기·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

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농식품 모태펀드는 총 13개 자펀드를 통해 3179억 원 규모로 결성하며 2010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결성 목표를 1169억 원 상회한 규모다.

특히 민간투자 비중은 전년(44.5%) 대비 20.1%포인트(p) 증가한 64.6%를 기록했다.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한 민간자본 유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평가다.

또 청산이 완료된 27개 자펀드의 누적 내부수익률(IRR) 역시 7.2%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장기적인 정책금융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총 2470억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해 농식품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에 1000억 원 ▲청년기업 투자에 480억 원 ▲세컨더리펀드 조성에 350억 원 ▲농식품 일반

분야에 3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240억 원 ▲민간제안 분야(유통)에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술 기반 농식품 기업의 성장, 청년 인재의 농촌·농식품 산업 유입, 지역 기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목적 투자와 시장 수요 간의 연계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영세한 청년 기업들이 적기에 충분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7년 이내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했던 푸드테크 분야는 후속 투자 등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업력 제한을 없애고, 청년기업성장펀드의 초기·사업화 단계별로 건당 3억 원, 5억 원이었던 투자금액 상한도 폐지한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농식품 혁신기업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투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 활성화’ 머리 맞대

중앙·지역 일자리 정책 협의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스페이스슈어 서울역센터에서 ‘중앙·지역 일자리 정책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 전환’을 반영한 ‘지역 고용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시·도 일자리 정책 담당 국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노동부는 올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대폭 개편하고, 정책 기조를 ‘지역 주도·중앙 지원’으로 전환한다. 중앙정부가 일자리 사업을 설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고용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과 제도 정비 등 후방 지원 역할에 집중한다.

특히 노동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초광역 연계 일자리 사업 ▲지역 일자리 성과공시제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혁신 등 주요 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공모 참여를 당부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지역의 의견들은 향후 정책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해수부, ‘해양수산 창업지원센터’ 추가 공모

해양수산부는 1월14일부터 2월13일까지 한 달간 지방정부(시·도)를 대상으로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와 소기업 등에게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일자리 지원사업이다.

센터에서는 창업부터 성장, 도약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성장과정 전반에 걸쳐 ▲창업·경영 상담(컨설팅) ▲시제품 개발과 마케팅 판로 지원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지원 프로

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가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시·도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부산, 제주, 경북, 강원, 전남, 충남, 전북 등 총 7개 지역 거점에서 운영 중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도는 센터를 직접 운영할 사업수행기관을 사전에 선정해 사업필요성, 사업내용, 기대성과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2월13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aT, ‘국산 콩 소비 활성화’ 토론회 개최

홍문표 사장 “콩 산업 발전 최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산 콩 소비활성화를 위한 산업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13일 aT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 행사에선 ▲국산 콩의 소비수요 확대를 통한 생산량 견인 ▲자급률 높이는 시장의 선순환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

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콩 산업 정책 및 발전 방안’을 제시했고, 한국들녘 경영중앙연합회는 ‘생산자의 시각에서 본 소비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 생산자단체, 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5인이 ‘국산 콩 소비활성화를 위한 산업발전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홍문표 aT 사장은 “생산과 소비가 함께 어우러져 국산 콩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중한 제안들이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대국민 사과

“농민신문 등 검직 사임… 농협 조직쇄신 단행”

외부 전문가 중심 ‘농협개혁위’ 구성
강 회장 “책임있는 자세로 신뢰 회복”

비위 및 방만 경영의 중심에 선 농협중앙회가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직 등 검직 중인 자리에서 물러나고 해외 스위트룸 숙박비도 반환한다고 밝혔다.

또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손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배구조와 선거제도 등 구조개혁에도 착수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적·조직 쇄신 계획을 밝혔다.

강호동 회장은 “국민과 농업인 여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던 중 고개숙여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분의 엄중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농협은 우선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관례적으로 검직해 온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인사를 비롯한 경영 전반을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 등 본연의 책무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호화 호텔숙박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해외 숙박비 규정은 물가 수준을 반영해 재정비하고,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은 강 회장이 개인적으로 반환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산업부, ‘3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절차 착수

핵심 키워드 ‘균형발전·생태계 확장’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와 연계해 권역별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기업 간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지방자치단체, 앵커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부장 특화단지 3기 선정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3기 특화단지 선정의 핵심 키워드는 ‘균형발전’과 ‘생태계 확대’다. 산업부는 ‘5극 3특’ 체제에 맞춰 권역별 대표 전략산업과 소부장 특화단지 간 연계·시너지 창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절차 측면에서는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검토제’가 처음 도입

된다. 먼저 지자체가 핵심 구상을 담은 ‘개념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위원들이 정책 적합성을 컨설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오는 3월 공식 공고와 함께 신청 접수를 시작한 뒤, 서면·현장 평가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6월께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최종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